

## 월요광장

## 휴가를 휴가답게 보내는 방법



**박천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고용개발연구실장

여름휴가를 맞이하여 해외로 여행을 가는 사람에게 많다. 그 중에서 이탈리아는 유명관광지가 많아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바다 위에 도시를 세우고 아름답게 꾸민 베니스도 좋지만, 접근성이 높고 교황청(Vatican)이 있는 수도 로마는 대표적인 이탈리아 관광지이다.

온대한 건축물이나 미술품 등 각종 유적은 '관광지 로마'에 대한 기억을 오랫동안 남게 한다. 그래서 유럽 여행을 할 때 로마를 맨 나중에 관광하다고 한다. 유럽 관광지의 대부분이 로마문명의 아류(亞流)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갖기 때문이다.

로마 시내를 돌아다니면 2000년도 더 지난 로마제국의 유적을 곳곳에서 마주할 수 있다. 고대국가 로마(BC753-AD476)는 로마에서 작은 도시국가로 발생하여, 세 차례에 걸친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대제국으로 성장하였다. 로마제국은 군사력, 종교, 법률로 세계를 세 번이나 지배했다고 하는데, 그 만큼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이 크고 깊다는 의미이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문법에 근거한 사법체계나 지방자치체계도 로마제국에서 기원한 것이다. 우리가 쓰고 있는 2월이 봄고, 7월과 8월이 겨울과의 (영어) 이름도 이러한 태양력으로 로마제국에서 유래한 것이다.

본국 이탈리아는 물론 북아프리카와 유럽에 산재한 유적은 로마제국이 1000년 이상 번영할 수 있었던 근거를 제시하는 것 같다. 특히 여러 도시에 맑은 물을 공급하던 장대한 '수로'나, 2000년이 지난 현재 사용에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 '로마가도'를 보면 그런 생각이 더해진다.

귀족계층만 아니라 평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하여 사회간접시설을 건설하고, 그것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 체계를 세심하게 구축

한 '로마인'이 존경스러워지기까지 한다.

이러한 로마인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로마제국 5현제의 한 명인 하드리아누스(Hadrianus, 117~38년 재위) 황제가 있다. 로마제국의 유적을 따라 여행을 하다 보면 많은 건축물에서 볼 수 있는 이름이다. 하드리아누스 신전, 하드리아누스 도서관, 하드리아누스 문(門) 등이 각지에 있는데, 황제가 직접 현지에서 건축을 지시하거나 지원한 것이다.

이 가운데 유네스코가 1987년 세계유적으로 선정한 하드리아누스 성벽(Hadrian's Wall)이 있다. 서기 122년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자주 출몰하던 야만족으로부터 방어를 위해 현장에 직접 가서 성벽 건축을 지시했다.

8년에 걸쳐 건설된 성벽은 현재 영국의 뉴캐슬에서 솔웨이만까지 둑서로 약 117.5 km에 걸쳐 있다. 이 방어벽은 하드리아누스 황제 당시 로마제국의 최서단(最西端) 국경선이 되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다른 황제들과 달리 인기 있는 정복 활동과 개선식보다 각 속주를 직접 방문하여 현안을 해결하고, 제국의 방어를 튼튼하게 하는 데 재위 기간의 대부

분을 보낸다.

수도 로마에서 화려한 행사나 정치활동을 최소화하고, 국경선을 돌아다니며 군인들과 함께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묵묵히 황제로서의 직분을 다했던 것이다. 그 결과로 로마제국은 상당기간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다.

이처럼 어느 기업(조직)이나 사회, 국가에는 화려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되지만 잘 수행되어야 할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추진되느냐가 그 사회(조직)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그런데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일의 성격상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이런 일들이 잘 수행되기 위한 조건으로 구성원의 일에 대한 태도와 조직문화가 갖는 중요성이 크다. 그러므로 주어진 일을 소명(calling)으로 받아드리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많을 때, 그 조직(기업)과 국가는 융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에서 잠시 벗어난 휴가지에서 직장과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일에 대한 태도와 문화'를 차분하게 재점검하는 것도 휴가를 휴가답게 보내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

## 社說

## 위기의 정치국면 'DJ정신'으로 극복하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4주기 추도식이 부인 이희호 여사와 유족을 비롯해 정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18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렸다. 광주·전남 곳곳에서도 17~18일 김 전 대통령의 정신을 기리는 추도식과 추모행사가 열렸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평생 가시밭길을 걸었던 김 전 대통령은 우리에게 여러 과제를 남겼다. 그가 생전에 그토록 원하고 노력했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민족 화해, 동서화합, 그리고 경제 민주화와 서민복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우리가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DJ 정신'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DJ 정신'과는 접점 떨어져 가고 있다. 국정원 대선 개입에서 비롯된 여야의 극한 대치와 민주주의 위기론이 부상하고 있으며, 빈부격차와 사회분열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지금 서울광장에서는 지난 6월 말부

터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촛불이 켜지고 민주당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불타기'로 정국이 더욱 경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청문회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선서는 물론 범죄사실까지 모두 부인하며 청문회를 농락했다.

이는 민주주의와 정치질서를 짓밟는 오만한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실타래처럼 얹힌 현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나서 영수든, 3자회담이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 정국 대치가 계속되는 건 결국 국민을 옥죄는 일이다.

요즘처럼 혼란의 상황에 'DJ 정신'이 절실히 때가 없다. 우리 앞에 닥친 위기와 도전을 통합과 화해, 화합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고 실천한 김 전 대통령의 삶과 정신은 시간이 흐를수록 빛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 법조칼럼

## 변론주의와 입증책임 그리고 사법신뢰



**김정호**  
변호사·법무법인 이우스

일반시민들이 일생을 사는 동안 민사재판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흔한 일이다. 이와 같이 재판경험이 전무한 사람일 수록 법적인 분쟁이 자신의 문제가 돼 법정에 서게 되는 경우 사법부가 스스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알아서 잘 판단해 줄 것으로 막연한 기대를 갖는 경우를 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인들의 사법부에 대한 막연한 신뢰와 기대는 민사소송의 특성인 변론주의와 입증책임 등의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때로는 재판결과를 놓고 사법부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는 일반인들이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특성과 차이를 알지 못해 민사재판의 경우에도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재판부가 실제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직권으로 조사하고 판단한다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법정에서 만나게 되는 일반시민들이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양 당사자가 모두 아는 사실을 판사만 모르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것도 민사재판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해

고 있다는 정황 중의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민사재판에서 냉정하게 말하면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양 당사자가 모두 아는 사실을 재판장인 판사만 모르고 있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제3자인 판사는 어떠한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백지 상태에서 사건의 심리를 시작해야 하고 양 당사자가 객관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소송자료를 토대로 판사의 자유심증으로 판결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사실과 증거 등 소송자료의 수집책임은 당사자에게 맡겨져 있고 법원은 당사자가 수집해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변론주의와 입증책임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당사자 스스로 주장을 정리하고 증거수집에 만전을 기하려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시민으로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구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평소 자신의 법률관에 관한 책임을 끔끔히 청가는 노력이 필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변론주의와 입증책임의 제도상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관계이지만, 실제적 진실과는 명백히 다른 판결이 실제 현실에서는 얼마든지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만은 없을 것이다. 분명히 돈을 빌려 준 것이 사실이지만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하는 경우나 반대로 돈을 빌리고 이

를 모두 변제했더라도 빌린 돈을 변제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은 구체적 재판과정에서 돈을 빌려준 사실뿐만 아니라 돈을 빌리지 않은 사실도 입증되지 않았으나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입증책임에 따라 재판의 결과는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원고가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원고가 패소부담의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이다. 입증책임제도는 이처럼 인간의 인식과 기억능력이나 당사자의 입증노력을 인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진위불명(眞偽不明)이라는 이유로 재판을 거부할 수도 없는 일이고, 사실이 증명될 때까지 미양재판의 진행을 연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진위불명상태에서도 판결할 수 있도록 고안해낸 고육책이기 때문이다.

또 변론주의는 소송수행능력이 평등한 쌍방당사자의 대립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실제 현실에서 소송의 당사자는 완전하거나 평등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통상적이다. 특히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못하고 당사자 스스로 소송수행을 하는 본인소송의 경우에는 충분한 소송자료의 수집과 제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실제 현실에서 소송자료의 수집과 제출에 관해 법원이 전혀 개입하지 않은 채 변론주의를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만 적용한다면 당사자의 소송수행능력 부족으로 승소할 사안

를 모두 폐소를 당하는 폐단과 불합리가 발생하게 되고 바로 이 지점에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맹아가 싹트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변론주의와 입증책임이 아무리 중요한 민사재판절차에서의 제도라고 하더라도 변론주의의 기계적·형식적 관철보다는 보완과 수정논의가 필요하고, 입증책임도 진위불명에 대한 재판 불가능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일 뿐이라는 사실을 사법부가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민사재판절차에서도 소송의 스포츠화를 막고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목표를 아래 표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사법부와 국민 사이의 인식의 괴리를 좁히고 판결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국민과 소통하는 사법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변론주의와 입증책임제도의 사각지대에 일반시민을 그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변론주의와 입증책임의 법리에 기대어 쉽게 사건을 해결하려는 데도 보다는 충실했던 소송절차의 안내, 소송구조제도의 활용을 통한 본인소송의 보완, 적절한 석명권의 행사, 입증촉구 등을 통하여 당사자에게 전혀 예측 불가능한 판결이 선고되는 결과를 재판과정에서 줄일 수 있는 수고로움을 감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재판부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포함한 법률가들 전체가 법리보다는 사실관계의 확인과 규명에 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 기고

## 지역발전에 기여할 은행장 조속히 선임돼야



**김일태**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광주은행 선임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광주은행 내부 경영공백은 물론 매각을 앞두고 기업가치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월 10일 송기진 행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정부의 분리매각 방침이 공식 발표되면서 차기 은행장 선임이 속도를 낸 것으로 전망됐지만, 2개월 가까이 행장 선임이 늦어지고 있다. 광주은행장후보주천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 서류 심사를 통해 12명의 후보 가운데 5명을 후보로 압축한 뒤 우리금융지주 경영전략회의가 열린 지난 7월 27일 전에 행장후보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 또한 빛나고 말았다.

이 지역 중주적인 금융기관인 광주은행 CEO선임의 표류는 지역경제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추석 명절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지역상권 및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체에 추석 명절 자금지원을 돌려하고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행장 선임의 지연으로 금융지원에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또한 광주은행은 영업 및 인사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하고 있으나 8월이 다 된 지금까지 인사 및 하반기 경영전략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은행은 CEO 선임도 민영화 3대원칙에 가장 적임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먼저 조기 민영화와 공적자금회수국 대회를 위해서는 조직이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조직의 핵심역량과 내부 임직원을 빠르게 결집하여 조직의 안정을 주구할 수 있는 CEO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최고가 매각원칙을 고수하지만 즐기자기 차지에 주장하고 있는 지역 우선협약과는 명백히 다른 판결이 실제 현실에서는 얼마든지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만은 없을 것이다. 분명히 돈을 빌려 준 것이 사실이지만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하는 경우나 반대로 돈을 빌리고 이

를 모두 변제했더라도 빌린 돈을 변제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은 구체적 재판과정에서 돈을 빌려준 사실뿐만 아니라 돈을 빌리지 않은 사실도 입증되지 않았으나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입증책임에 따라 재판의 결과는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원고가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원고가 패소부담의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이다. 입증책임제도는 이처럼 인간의 인식과 기억능력이나 당사자의 입증노력을 인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진위불명(眞偽不明)이라는 이유로 재판을 거부할 수도 없는 일이고, 사실이 증명될 때까지 미양재판의 진행을 연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진위불명상태에서도 판결할 수 있도록 고안해낸 고육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광주은행은 민영화 일정에 따라 3~4개월 후면 우리금융그룹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도록 되어있다. 바야흐로 광주은행은 지역금융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담당하는 선순환 지역경제구조의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은행으로 재탄생되는 것이다. 이제

부터 재탄생하는 광주은행은 지역자금의 지역내 순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영세민의 자금지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글로벌 은행으로 도약해야 할 시기이다. 민영화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 조직의 안정과 지역민의 바람을 이해하고 민영화의 3대 원칙을 지키면서 금융산업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광주은행 최초의 내부출신 CEO가 선임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광주은행은 CEO 선임도 민영화 3대원칙에 조기민영화, 공적자금 회수국 대회를 위해서는 조직이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조직의 핵심역량과 내부 임직원을 빠르게 결집하여 조직의 안정을 주구할 수 있는 CEO여야 할 것이다.

광주은행은 민영화 3대원칙에 조기민영화, 공적자금 회수국 대회를 위해서는 조직이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조직의 핵심역량과 내부 임직원을 빠르게 결집하여 조직의 안정을 주구할 수 있는 CEO여야 할 것이다.

광주은행은 민영화 3대원칙에 조기민영화, 공적자금 회수국 대회를 위해서는 조직이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조직의 핵심역량과 내부 임직원을 빠르게 결집하여 조직의 안정을 주구할 수 있는 CEO여야 할 것이다.

광주은행은 민영화 3대원칙에 조기민영화, 공적자금 회수국 대회를 위해서는 조직이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조직의 핵심역량과 내부 임직원을 빠르게 결집하여 조직의 안정을 주구할 수 있는 CEO여야 할 것이다.

광주은행은 민영화 3대원칙에 조기민영화, 공적자금 회수국 대회를 위해서는 조직이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조직의 핵심역량과 내부 임직원을 빠르게 결집하여 조직의 안정을 주구할 수 있는 CEO여야 할 것이다.

광주은행은 민영화 3대원칙에 조기민영화, 공적자금 회수국 대회를 위해서는 조직이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조직의 핵심역량과 내부 임직원을 빠르게 결집하여 조직의 안정을 주구할 수 있는 CEO여야 할 것이다.

광주은행은 민영화 3대원칙에 조기민영화, 공적자금 회수국 대회를 위해서는 조직이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조직의 핵심역량과 내부 임직원을 빠르게 결집하여 조직의 안정을 주구할 수 있는 CEO여야 할 것이다.

광주은행은 민영화 3대원칙에 조기민영화, 공적자금 회수국 대회를 위해서는 조직이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조직의 핵심역량과 내부 임직원을 빠르게 결집하여 조직의 안정을 주구할 수 있는 CEO여야 할 것이다.

광주은행은 민영화 3대원칙에 조기민영화, 공적자금 회수국 대회를 위해서는